



## 경기도 고양시새마을회 “공익성 제보자” 해임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의뢰 “내로 남불” 심각

경기도 고양시새마을부녀회장의 해임안을 두고도 법원의 효력 정지 판결을 무시한 채 재차 해임을 의결하는 등, 고양시새마을회 내의 '기득권 카르텔'과 '보복성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혁미 고양시부녀회장은 2024년 부녀회장 취임 후 정관 변경 과정에서 회의록 변조,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임의 변경 등을 문제삼아 해임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7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으나 법원은 10월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새마을회는 다시 해임 절차를 진행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고양시새마을회가 정부 및 지자체 보조를 받는 단체임에도 내부 비리와 권력 남용, 무자격 포상 등 여러 문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고양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달리 문서를 위조하고,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이를 합리화하려고 허위사실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법인등기를 하여 말썽이 일고있다.

법인등기는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법인등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로 등기하는 경우 부정 등기 및 등기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가 된다.상급 기관인 경기도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철저한 조사와 개혁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새마을회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된장 절도행위) 등 불투명한 사무국 행정업무 등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제11대 경기 고양시새마을회 회장에 취임한 김봉진회장은 전임 박○빈회장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의혹까지 불거져 김봉진회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박○빈씨는 구속되었다.

고양시새마을 단체 내의 부적절한 주요 내용은

- 기부금 개인 보관: 직원이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단체 계좌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 확인.

- 전임 회장 횡령 의혹: 전임 회장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1억 원대의 횡령 정황 포착.

- 공익 제보: 김 회장은 상급 기관인 경기도 새마을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내로남불: 제보자인 김 회장은 해임된 반면, 비리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은 오히려 상급 기관(새마을운동중앙회 등)으로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되면서 조직 내 “내로남불”식 인사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판결 요지: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조직

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이를 밝힌 제보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허○남 사무국장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돌려주고 반환 문서까지 작성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직원이 다시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한 이상한(4천만원.횡령 등) 회계를 조사하고 바로 잡고자, 내부 조사 후 상급기관인 경기도새마을회에 제보 한 공익성 제보자를 내부고발자로 낙인찍어 억지 주장을 합리화하여 선거직임원해임 시키는데 앞장선 당시 이사장 당시자인 고양시새마을회 허○남 사무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식 전 사무총장(인천공항 낙산산 감사의혹사)은 징계 대상자를 오히려 새마을운동중앙회 차장으로 승진, 그리고 경기도새마을회 부장으로 또 승진에 승진을 거듭 충남새마을회 사무처장으로 발탁된 후 2025년 정년퇴직을 했다.

비리를 바로잡으려 공익제보를 했던 김 회장을 오히려 상급인 경기도새마을회는 김 회장을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9년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으나, 법적 소송 끝에 해임 무효 처분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새마을회는 2025년 법적 소송판결에 의해 소송비용 약 3800만 원을, 경기도 새마을회 부동산담보 대출받아, 김회장에게 배상했다며, 앞으로 피해 보상 청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 한다. /기동취재부

## 공공기관 이전 시즌2...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판 요동’

정부,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핵심은 ‘기관 우선 배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하면 최대 수혜지로 부상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행정 통합 광역지자체(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통합이 실행되면 광주·전남이 이전 경쟁의 최대 수혜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공공기관을 집중해서 배치하는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기존 혁신도시 간 ‘나눠 갖기’ 방식에서 벗어난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전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이면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시 부여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은 통합특별시에 기관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이전 대상 기관 역시 지역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 공공기관은 특별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통합협의체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통합시 내 혁신도시에서 이전되는 공공기관 수를 기존 혁신도시 대비 2배 이상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일정대로 오는 7월1일 통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각종 정책 우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2차 이전계획을 확정된 뒤 2027년부터 임대 청사 활용 등을 통해 ‘선도 이전’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구조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기업 추가 유치 등 연쇄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6개로 통합이 성사되면 도시 확장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에, 전남도는 농업·수산업 지원 기관 유치에 각각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한전 인재개발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AI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점과 한국여초어항공단 등 농어민 지원에 특화된 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대통합’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합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10~20대 현월자 43.6% 급감

### 광주·전남 혈액 부족 심화

광주·전남 지역의 10~20대 현월자가 지난 10년 사이 43.6%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1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2015년 광주·전남지역 현월자는 17만9759명에서 2025년 10만1313명으로 7만8446명이 감소했다. 특히 16~19세 청소년은 9만2190명에서 4만1164명으로 55.3%나 줄었다.

혈액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현월가능 인구 감소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광주·전남 10대 현월가능 인구는 10

년 새 18만9060명에서 12만1686명으로 35.6% 감소했다. 20대도 40만5237명에서 33만299명으로 18.6%가 줄었다.

현월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든음에도 불구하고 현월 참여율까지 하락했다. 2015년 현월가능 인구의 9.0%가 현월에 참여했으나 지난해는 8.0%로 떨어졌다.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은 “조종고 학생들에게 현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홍보를 통해 미래 현월자들에게 건전한 현월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광주·전남의 혈액보유량은 3.7일분(O형 3.0일, A형 3.0일, B형 5.8일, AB형 3.5일)으로 권장 기준인 5일분 미만이다. /이승원 기자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는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